

『資本論』은 資本主義를 잘 說明하는가? <sup>(1)</sup>

洪 起 玄

이 논문은 맑스의 경제학에 대해 이론적 일관성, 연구의 현실적합성, 연구의 범위 등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론의 일관성면에서는 一財貨모형에서 성립되는 명제들이 이론의 존재이유에 대해서는 다재화모형에도 어느 정도 확장가능하나 가격설명에는 확장불가능하며, 연구의 현실적합성면에서는 노사관계의 대립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적합하나, 연구의 범위면에서는 노동자의 동료관계나 기업의 경영방식에 관해서는 적절히 설명하기에는 분석도구가 너무 제약적임이 밝혀졌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이론의 단순명료성면에서의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장래 연구성과의 풍부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1. 序 論

맑스의 주저 『資本論』은 경제사상사상 현실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책의 하나로서, 맑스주의자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비맑스주의자들 간에도 이 책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김수행(1988a)의 서베이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 나라에서도 198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맑스경제학이 논의되면서, 학계 내외에 걸쳐 많은 논쟁이 있었으며, 전문적인 사회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는 꽤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맑스경제학의 持續性은 맑스의 자본주의 붕괴론과 같은 예견이 대부분 맞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의아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맑스의 예측이 틀렸으면 그 나름대로 검증가능성조건은 충족시킨 과감한 가설이 되므로 충분히 개선하여 좋은 과학이 될 수도 있다는 포퍼적인 과학방법에 비추어 볼 때, 예측이 맞지 않다고 이론체계가 없어지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정통적인 경제학에서는 Samuelson(1957)의 평가에서 나타나듯이, 맑스경제학이 상대가격 설명에 실패한 점에 주목하여, 오류이거나 열등한 이론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이상 맑스경제학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러한 평가 그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론선택의 기준이 반드시 시장경제에서의 價格說明의 有效性에만 있는 것임은 아니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비판은 맑스경제학이 어떤 한 문제를 설명하

(1) 이 논문은 1993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 되었음.

는 데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데 불과하며, 맑스경제학자들이 계속 말해왔듯이 생산과정상에서의 勞使關係 및 政治經濟的 關係 解明에 장점을 발휘할 여지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내린 결론은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라카토스적인 의미에서 정통경제학이 맑스경제학보다 모든 문제에서 많은 사실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로단과 같이 앞으로의 연구결과의 풍부성 또는 발전가능성 면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맑스경제학은 나름대로 존립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자본주의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더 좋은 이론에 의해 대체될 때까지 학문적 수명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논문에서는 『資本論』을 중심으로 하여 맑스경제학의 장단점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앞으로 맑스경제학의 운명을 짐쳐보기 위해, 맑스경제학의 내재적, 초월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절에서는 맑스경제학을 1재화 모형, 다재화 모형하에서 이론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주로 대상이 되는 맑스이론은 價格理論과 蓄積理論이며, 이미 이에 대한 종합적 논문이 많으므로 가급적 간단한 수리적 검토만을 하려고 한다. 제 3절에서는 맑스경제학의 현실적합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이에 관계되는 多樣的 接近法을 소개하고 정통적인 맑스경제학과 비교 검토 하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Roemer(1988) 등에 의해서 개발된 소위 분석적 맑스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등장 및 자본주의적 관계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이론을 소개하고 이의 의의를 살펴본다. 이 논문이 맑스경제학의 발전에 관한 소개가 아니며, 지면의 제한과 필자의 능력상 광의의 맑스경제학 내부의 다양한 조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마지막으로 제 4 절에서는 앞의 논의를 종결하면서, 맑스경제학의 現實的 影響力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 2. 맑스經濟學에 대한 內在的 檢討

### 2.1. 一財貨 模型

맑스는 『資本論』의 冒頭에서 자본주의를 분석하기 위해 상품의 속성을 분석해야 한다고 선언한 뒤, 각종 상품에 공통되는 기본적 속성이란 “상품체의 사용가치를 무시한다면…… 지출형태와는 관계없이 지출된 인간노동력의 단순한 응고물”(제 1 권, p. 47)<sup>(2)</sup>이 남는다고

(2) 여기서 인용된 『資本論』은 김수행의 번역서를 이용했으며, ( )안의 권수와 페이지수도 번역서의 것을 나타낸다.

말한다. 따라서 맑스의 논의는 각상품의 가치가 투하된 노동량에 비례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양적인 크기를 기준으로 각계급의 소득분배의 원천과 자본주의 하에서의 각계급의 기본적인 행태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행해진다. 이러한 맑스의 생각은 자본의 생산과정을 분석하는 『資本論』의 제 1권에서는 명시적으로, 자본의 유통과정을 분석하는 『資本論』의 제 2권에서는 암묵적으로 지켜진다. 생산·유통·분배를 총괄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資本論』의 제 3권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완화되어 상품의 상대가격이 투하노동량의 비율과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자본주의의 움직임에 관한 중요한 몇 가지 명제에 있어서는 제 1권에서 입증한 명제의 결론이 손상받지는 않는다고 믿고 있다.

맑스의 이러한 생각은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재화가 1개라고 상정된 경제에서 엄격히 적용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1재화모형을 통해 맑스의 기본적인 이론을 간략히 소개한 후 적절히 평가를 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이 기호를 정하고 필요한 가정을 도입한다.

(A.1) 완전경쟁적 경제에서 선대자본을 가진 자본가와 자본을 전혀 갖지 않은 노동자가 존재한다.

(A.2) 어떤 상품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생산기간초에  $a$ 단위 ( $a < 1$ )의 이 상품과 노동  $l$ 단위가 쓰인다고 한다. 편의상 이 생산기술은 규모에 대하여 수익불변이라고 가정한다.

(A.3) 이 생산과정에는 고정자본과 다른 본원적 투입물이 쓰이지 않으며, 노동은 모두 동질적이다.

(A.4) 노동 1단위를 유지하는 데  $b$ 단위만큼의 상품이 필요하며, 이 수량은 일정하며, 자본가가  $b$ 단위 상품을 제공하면 노동 1단위를 노동자가 제공하는 계약이 해당기간 동안 실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에서 상품 1단위에 투하된 노동량을 가치(value)라 정의할 때, 가치  $x$ 는 가정 (A.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해지며, 맑스경제학자들은 이를 價値體系라고 부르고 있다.

$$(2.1.1) \quad x = ax + l,$$

또는  $x = l / (1 - a).$

노동 1단위를 구매하는 데 드는 가치 즉 노동력의 가치  $v_x$ 는, 가정 (A.4)와 식 (2.1.1)에 따라 다음과 같다.

$$(2.1.2) \quad v_x = bx = bl / (1 - a).$$

만약  $v_x < 1$  이라면, 생산과정에서 실제로 행한 노동  $l$  단위중에서 대가를 지불받는 노동은  $v_x l$  이 되며,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不拂勞動은  $(1 - v_x)l$  이 된다.

이에 따라 맑스는 상품의 가치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고정자본의 감모분과 원료의 가치로 이루어져 생산과정에서 가치의 변화가 없는 不變資本(constant capital,  $c$ ), 실제로 행한 노동 중에서 지불받으며 가치창조의 원천이 되는 可變資本(variable capital,  $v$ ), 그리고 지불받지 못한 노동으로부터 나오는 剩餘價値(surplus value,  $s$ )라고 부르고 있다. 나아가 보조적인 개념으로서 실제로 행한 노동 중에서 지불받는 노동량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을 剩餘價値率(rate of surplus value,  $e$ )라고 부르고 있다. 즉,  $e = s/v = (1 - v_x)/v_x$ .

위와 같은 가치체계는 사실상 모든 수량을 동질적인 투하노동량으로 환산한 것이기 때문에 각계급에게 돌아가는 몫을 가격변수에 의존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각수량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가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검토해야만, 시장경제의 분배분을 알 수 있는 불편함도 있다. 이제 생산기간당 利潤率 또는 利子率을  $r$ , 貨幣賃金을  $w$ 라 할 때 이 상품의 生産費  $p$ 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는 生産價格(price of production)體系라고 불리고 있다.

$$(2.1.3) \quad p = (1 + r)(pa + wl),$$

$$(2.1.4) \quad w = pb.$$

식 (2.1.3)에서 계산되는 이윤율은 통상적인 장기균형하의 이윤율로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1.5) \quad r = (p - pa - pbl) / (pa + pbl) = (1 - a - bl) / (a + bl).$$

그런데 이 식을 다시 쓰면, 이윤율을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합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 즉,  $r = s/(c + v)$ 로 나타낸다.

이러한 관계에서, 잉여가치율이 양이어야, 즉 지불되지 않는 노동이 있어야 이윤율이 양이며, 그 역도 성립함을 보일 수 있다.

$$(2.1.6) \quad v_x < 1 \Leftrightarrow e > 0 \Leftrightarrow r > 0.$$

위의 관계를 Morishima(1973)는 맑스경제학의 基本命題(fundamental Marxian theorem)이라 부르고 있으며, 이 식은 다재화경제에로 일반화될 수 있다. 나아가  $p = x$ 라고 두는 것과 같이 가치와 가격의 단위를 적절히 정할 경우 가치체계에서 결정되는 잉여가치와 생산가격 체계에서 결정되는 이윤이 같음을 보일 수 있다.

$$(2.1.5)' \quad s=r(c+v)=r(a+bl).$$

이러한 관계를 근거로 하여 맑스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윤의 배후에 있는 본질적 결정 요인으로서 착취된 노동인 잉여가치가 존재함을 입증하였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맑스의 주장은 옳다고는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이론적인 문제로서, 식 (2.1.5)'의 관계가 다재화경제로 일반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재화경제에서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하여 가치를 생산가격을 계산할 때 평균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문제를 맑스는 轉形問題(transformation problem)라고 부르고 있다.

둘째로,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로서 맑스가 입증하였다고 말하는 명제의 의미에 관한 것으로서, 맑스가 입증한 것은 장기균형상태에서 존재하는 이윤이 착취된 노동일 수 있다는 것이지 이윤을 설명하는 다른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學派의 資本理論에서 설명하듯이 장기균형상태의 양의 이윤율의 존재이유가 시간선호, 소득증가에 따른 미래소득의 한계효용감소, 생산의 우회도에 있다고 보아도 장기균형가격을 설명할 수 있다. Negishi(1989)가 지적하듯이 직관적으로 보아도, 생산수단의 사유권이 인정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기간 말에 나오는 모든 附加價值(value added)를 생산기간초에 노동자의 몫으로 모두 주어야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잉여가치를 착취된 소득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색한 표현이다. 나아가 현실에서 존재하는 잉여에는 장기균형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Schumpeter(1934)와 같이 장기균형상태에서는 陽의 이윤율 또는 이자율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술혁신에 의해 獨占的 所得으로서 양의 이윤이 나온다고 보는 것도 얼마든지 타당한 견해가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본주의경제의 성장의 원천이 되는 잉여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조직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를 이해하는 데 어떤 이론이 가장 설득력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경우 현재 경제학의 연구결과로서는 어떤 한 가지 답이 나올 수는 없을 것이며, 경제조직, 생산기술에 관한 문제는 Rosenberg(1982)의 표현대로 '암흑상자'(black box)에 싸여 있다고 보겠다. 잉여창출메커니즘을 막연히 우회적 생산의 이익이라고 부르는 것이 현실이 해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정도로, 추상적으로 노동의 착취에 있다고 하는 것도 도움을 주지 않으며, 때로는 현실이해를 방해하는 수도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의 움직임 분석하는 데 추상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각종 가설체제들이 얼마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가에 있다.

따라서 (2.1.6) 식에 나타난 맑스의 견해는 그 자체로서는 현실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

는 명제가 아니며, 말하자면 라카토스의 방법론에서 말하는 中核(hard core)이다. 이 핵심적 명제는 다른 보조적 가설과 더불어 함께 複合的인 檢證(joint-test)을 거치며, 듀얼-파인의 주장과 같이 복합가설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맑스경제학자들이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중심적 가설이 된다.

이러한 방법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맑스경제학에서 복합적 가설로서 제시되고 있는 한 사례로서 利潤率低下說(theory of rate of profit to fall)과 관련된 주장들을 검토해 보자. 맑스는 잉여가치론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적 움직임을 규율하는 요인으로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기본적인 대립을 추출한 뒤, 자본가들이 노동자의 임금인상 및 생산과정에서의 결정권장악 요구를 퇴치시키기 위해 산 노동을 기계로 대체시키므로,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기계화가 진전된다고 주장한다. 이 기계화 정도를 가치 차원에서 측정하기 위한 지표가 資本의 有機的 構成(organic composition of capital)이다. 위에서 제시된 가장 간단한 모형에서는 유기적 구성( $q$ )이  $q=c/v$ 로 표현된다.

또한 이윤율의 공식을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 資本스투의 價値를  $K$ 라고 하면, 가장 간단한 모형에서는  $K=(c+v)$ 가 된다. 이 때 이윤율이란 매시점에서 생산과정에 묶여져 있는 자본스투에 대해서 매기간 동안 회수되는 이윤량의 플로우가 되며, 일재화모형에서는 이윤 플로우와 잉여가치 플로우가 같으므로 구매, 생산, 판매에 걸리는 모든 기간을 합산한 표준적인 단위기간당의 잉여가치를  $s$ 라고 하면, 이윤율  $r$ 은  $r=s/K=s/(c+v)$ 가 된다.

이제 유기적 구성( $q$ )와 잉여가치율을 이용하여 이윤율 공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2.1.7) \quad r=s/(c+v)=e/(1+q).$$

위의 식에서 분자에 있는 잉여가치율이 일정하다면, 유기적 구성이 상승할 때 이윤율이 저하한다는 관계가 쉽게 도출되며, 이것이 맑스가 말하는 이윤율저하설에서 ‘法則 그 自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기적 구성을 상승시키는 자본가의 기술변화 행동은 원래 잉여가치를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 가변자본의 고용을 줄이고 생산비를 다른 자본가보다 더 저렴하게 하려는 시도에서 나왔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고려해도 이윤율이 저하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맑스는 ‘相殺力’을 함께 고려한 이윤율저하의 경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법칙 그 자체’와 ‘상쇄력’을 함께 생각한 이윤율저하 경향을 이론적으로 간략히 검토하기 위해, 자본축적과정상의 각변수의 움직임을 간단한 비교정학적 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해보자. 계산의 편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몇 가지 변수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k$  : 전체 자본스톡중 불변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k=c/(c+v)$

$dK$  : 자본스톡의 기간당 증가분

$\alpha$  : 잉여가치 플로우 중 투자되는 비율, 즉  $dK=\alpha s$

$g$  : 자본스톡의 증가율, 또는 균형성장률,  $g=dK/K=\alpha r$

한편, 변수  $k$ 를 이용하여 이윤율공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이 됨을 유의해야 한다.

$$(2.1.7)' \quad r=s/(c+v)=e(1-k).$$

그리고, 가변자본과 제공된 노동 1단위에 대한 노동력의 가치는  $v=v_x l$ 의 관계를 가지므로, 고용량은 가변자본을 노동력의 가치로 나누면 알 수 있다. 즉  $l=v/v_x$ . 나아가 앞에서 이미 밝힌 바대로 잉여가치율은 노동력의 가치와  $e=(1-v_x)/v_x$ 의 관계를 가짐을 기억하자.

자본축적 즉  $K$ 의 증가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변수간의 정확한 함수관계를 알아야 하는데 맑스의 『資本論』에는 상호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통상적으로 자본축적과 유기적 구성의 증가를 독립적 변화로 하여, 유기적 구성의 증가가 價金財의 價値를 저하시켜 잉여가치율을 상승시키는 영향이 존재하며, 잉여가치율의 변화에 따른 價値構成의 변화는 없다고 본다. 즉  $e=e(k)$ , 또는  $de=-dv_x/v_x^2$ .

이제 (2.1.7)' 식을 전미분하면, 이윤율의 변화를 알 수 있다.

$$(2.1.7)'' \quad dr=de(1-k)-edk=\{e'(1-k)-e\}dk.$$

(2.1.7)'' 식의 결과  $k$ 증가의 결과 이윤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보통 교과서적인 맑스경제학의 소개서에서는 { }의 부호가 음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k<1$ 이므로, 유기적 구성의 변화에 따른 잉여가치율의 증가율이 100%를 넘기 힘들므로,  $e'/e<1/(1-k)$ , 즉  $e'(1-k)<e$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정당화가 더 필요하며, 이 문제는 아래에서 좀더 논의해 보겠다.

나아가 고용량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v=K(1-k)$  임을 이용하여,  $l$ 의 변화율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2.1.8) \quad \begin{aligned} dl/l &= dv/v - dv_x/v_x \\ &= dK/K - dk/(1-k) - dv_x/v_x \\ &= \alpha e(1-k) - dk/(1-k) - dv_x/v_x. \end{aligned}$$

자본축적에 따라 유기적 구성은 고도화되므로 가변자본의 비율은 줄어들지만, 노동력의 가

치는 저하하므로 (즉  $dk > 0$ ,  $dv_x < 0$ ) 고용량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큰지 적은지 알 수 없으며, 노동공급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과 같다면, 자본축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초과공급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가 성공한다는 보장이 이론적으로 입증될 수는 없다.

말하자면, 이윤율저하설에 대한 입증은 이론적, 경험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 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뚜렷한 결론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자료에 대한 Gillman(1957)의 연구에 따르면, 1840년대 이후 제조업부문에 대한 이윤율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추세는 발견하기 힘들다. 한국경제에 관해서 정성진(1990)의 연구 결과, 이윤율의 저하 추세가 발견되고 있지만,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하에서 외국으로부터 기계를 도입하여 생산을 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특수성에 의한 것인지 자본주의의 일반적 특성에 의한 것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經驗的 立證의 어려움은 사실상 경제학의 다른 가설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것이므로 가설의 생존가능성은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오히려 이윤율저하설의 理論的 基礎가 부실하다는 비판들이 더 문제가 된다. Okisio(1961)는 완전경쟁의 조건하에서 자본가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선택하므로, 기술변화 후 이윤율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명제를 제시하였고, 이를 오키시오 정리라고 부른다. 1제화모형하에서 이 정리를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1.3), (2.1.4)로 주어지는 가격체계하에서 기술은 중간투입물계수( $a$ )와 노동투입계수( $l$ )로 나타나며, 실질임금은  $b$ 로 주어진다. 이 때, 새로운 기술( $a', l'$ )하에서 비용이 감소한다고 하자. 즉

$$(2.1.9) \quad pa' + wl' < pa + wl.$$

새 기술이 보편화된 후 새로운 재화가격  $p'$ 와 이윤율  $r'$ , 임금  $w'$ 는 다음과 같다.

$$(2.1.3)' \quad p' = (1+r')(p'a' + w'l'),$$

$$(2.1.4)' \quad p'b = w'.$$

이 가격체계와 (2.1.3), (2.1.4)식으로 주어지는 기술변화 이전의 가격체계를 비교하여 이윤율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다. (2.1.3) 식과 (2.1.3)' 식에서 이윤율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1.10) \quad r = \{1/(a+bl)\} - 1,$$

$$(2.1.10)' \quad r' = \{1/(a'+bl')\} - 1.$$

(2.1.9)의 조건을 이용하면, 명백히  $r < r'$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키시오의 정리에 대해 여러 반비판이 있었는데, 오키시오 정리의 가정 중에서 완전경쟁가정이란든가 기술선택의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등이다. 이러한 비판은 이론의 현실적합성에 관한 것으로서, 이론체계의 일반성 또는 일관성과는 무관하므로, 여기서 검토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만 Foley(1986)의 비판으로서 실질임금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폐임금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경우 기술변화후 이윤율이 저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검토해 볼 만하다. 왜냐 하면 Foley(1986), Lipietz(1982) 등 마르크스 가치론의 일관성을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하는 학자들이 노동력 가치의 개념을 노동자계급 전체가 國民所得 중에서 차지하는 所得比率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석하면서 화폐임금일정의 가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윤율을 계산하는 (2.1.5)식을  $p=l/(1-a)$ 를 이용해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2.1.5A) \quad r = p/(pa + wl) - 1 = 1/[a + (1-a)w] - 1.$$

기술변화 후 투입계수가  $a'$ 로 바뀐 경우 이윤율은 다음과 같다.

$$(2.1.5B) \quad r' = 1/[a' + (1-a')w] - 1.$$

이 경우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 되면서  $a' > a$ 이면, 이윤율이 저하, 즉  $r' < r$ 되므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은  $a' > a$ 의 가정과 비용최소화 조건인 (2.1.9)와 양립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2.1.9)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2.1.9A) \quad (a' - a)/(l - l') < w/p = b.$$

이 조건에서 분모가 큰 경우라도 분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면, 다시 말하면 기술변화 후의 노동투입계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져서 비용최소화 조건을 만족시키는 형태의 기술변화라면,  $a' > a$ 와 (2.1.9A) 조건과는 양립가능하다.

이 주장의 의미는 비용이 줄어들더라도, 이윤율은 저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화폐임금이 일정한 대신 재화의 생산비는 줄어들므로, 기술변화에 따른 生産性 向上의 利益이 실질임금 상승으로 주로 흡수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해석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술변화 전에 기계의 도입을 저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약하던 노동자의 입지가 기술변화 후에 그 이익을 다 향유할 정도로 갑자기 커진다는 의미이므로 노사의 勢力 關係에 대한 아무런 설명없이 이론이 설정된 여건의 변화를 암묵적으로 들여온 셈이 된다. 이러한 식의 이론설정은 일관성 면에서 결함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맑스의 이론의 I재화의 정태적 분석에서 일관성 면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나, 동학적 분석면에서는 약간의 결함들이 발견된다고 평가된다.

### 2.2. 多財貨 模型

재화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제에서는 1재화모형에서 성립되는 많은 명제들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맑스의 이론도 다재화모형으로 확대가능한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맑스의 가치론이 다재화경제에서 성립되는지를 검토하는 문제는 맑스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학자들이 오랫동안 논란을 벌여온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Pasinetti(1977)에 의해 정리된 가치와 가격간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맑스에 의해 투입노동량으로 정의된 가치를 결정하는 방정식체계를 써보기로 하자. 中間財의 投入係數行列을  $A=(a_{ij})$ , 단  $a_{ij}$ 는  $j$ 재화 1단위 만드는 데 필요한  $i$ 재화의 양, 勞動投入係數 行벡터를  $l$ 이라고 할 때, 價値를 나타내는 行벡터  $v$ 는 다음과 같다.

$$(2.2.1) \quad vA + l = v.$$

$(I-A)$ 의 역행렬이 존재할 때, 이 식을 고쳐 쓰면 가치가 계산된다.

$$(2.2.2) \quad v = l(I-A)^{-1}.$$

노동력 1단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賃金財 列벡터를  $d$ 라고 하면, 勞動力의 價値는  $vd$ 가 된다. 맑스는 노동력의 가치가 노동이 실제로 1단위 투입된 것보다 적으므로, 즉  $vd < 1$ 이므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잉여가치가 나온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일한 노동중 지불받지 못하는 부분과 지불받는 부분의 비율을 剩餘價値率, 즉  $e = (1 - vd) / vd$ 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가치는 중간투입물의 가치인 불변자본, 노동력의 가치와 잉여가치 세 부분의 합으로 나타난다.

$$(2.2.3) \quad vA + vd(1+e)l = v.$$

이 식을 고쳐쓰면, 다음과 같다.

$$(2.2.3)' \quad v[I - A - (1+e)dl] = 0.$$

$v$ 는 영벡터가 아니므로, 위 식이 성립하려면  $[I - A - (1+e)dl]$ 의 행렬식이 0이어야 한다.

$$(2.2.4) \quad \det[I - A - (1+e)dl] = 0.$$

다음으로 모든 재화생산부문에서 동일한 이윤율  $r$ 이 성립되는 장기균형 상태에서 생산비인 生産價格(price of production)을 계산해 보자. 賃金을  $w$ 라고 하면, 임금은  $w = pd$ 로 계산되므로, 생산가격을 정하는 방정식체계는 다음과 같다.

$$(2.2.5) \quad (pA + pdl)(1+r) = p.$$

이 식을 정리하면,

$$(2.2.6) \quad p[I - (1+r)(A+dl)] = 0.$$

위 식에서  $p$ 는 0벡터가 아니므로, 행렬  $[I - (1+r)(A+dl)]$ 의 행렬식이 0이 되어야 한다.

$$(2.2.7) \quad \det[I - (1+r)(A+dl)] = 0.$$

그런데, (2.2.4)와 (2.2.7)을 비교하면,  $A=0$ 이거나  $e=r=0$ 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각재화의 가치의 비율이 생산가격의 비율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v_i/v_j \neq p_i/p_j$ .

다만 한 가지 의미있는 명제는 Morishima(1973)에 의해 “맑스경제학의 기본정리”라고 명명된 다음과 같은 정리이다.

**定理1**: 가정 (A.1), (A.3), (A.4)이 성립되는 고정투입계수 기술체제에서, 잉여가치율이 양이라는 명제는 이윤율이 양이라는 명제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즉  $e > 0 \Leftrightarrow r > 0$ .

**證明**: (i)  $r > 0 \Rightarrow e > 0$ 을 증명하는 것은 양의 정방행렬에 관한 페론-프로베니우스 정리를 쓰면 된다. (2.2.4)와 (2.2.7)을 고쳐 쓰면 다음과 같다.

$$(2.2.4)' \quad \det[\{1/(1+e)\}I - \{1/(1+e)\}A - dl] = 0,$$

$$(2.2.7)' \quad \det[\{1/(1+r)\}I - (A+dl)] = 0.$$

이 행렬식을 보면,  $1/(1+e)$ 는  $\{1/(1+e)\}A + dl$  행렬의 특성근이며,  $1/(1+r)$ 은  $(A+dl)$  행렬의 특성근임을 알 수 있는데  $e > 0$ 인 한, 후자가 명백히 큼을 알 수 있다. 즉  $1/(1+e) < 1/(1+r)$ 이다. 따라서,  $e > r$ 이 되며,  $r > 0$ 라면,  $e > 0$ 가 된다.

(ii)  $r > 0 \Leftarrow e > 0$ 의 증명도 앞과 유사하다. 먼저 가치를 계산하는 식 (2.2.3)에서 행렬  $(A+dl+edl)$ 의 최대특성근이 1임을 알 수 있다. 왜냐 하면,  $1 \cdot v = (A+dl+edl)v$ 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생산가격을 계산하는 식 (2.2.5)에서 행렬  $(A+dl)$ 의 최대특성근은  $1/(1+r)$ 임을 알 수 있다. 왜냐 하면,  $\{1/(1+r)\}Ap = p$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e > 0$ 인 한,  $A+dl+edl > A+dl$ 이므로, 특성근의 값을 비교하면,  $1/(1+r) < 1$ 이다. 즉  $e > 0$ 이면  $r > 0$ 이다. ■

잉여가치율이 양인 것이 이윤율이 양인 것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명제의 의미는 사실상 본원적 투입요소가 하나밖에 없고 규모에 대한 수익도 불변인 경우 그 본원적 투입의 기여보다 적게 지불되어야 잉여가 나온다는 것이므로 단순명백하다. 따라서 이 명제가 현실적

으로 경제에서 잉여가 산출되는 이유를 다 설명하지 못함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이제 그렇다면 다재화 경제에서 가치라는 어떤 양을 측정하여, 어떤 현실을 설명할 수 있을가를 보기 위해, 가치와 가격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여기에는 소위 총계일치라는 문제가 검토되는데, 어떤 적절한 절대수준으로 노동시간과 화폐가격의 크기를 같게 만들었을 때, 각재화에 대한 임의의 산출량을 나타내는 열벡터  $x$ 에 대해서 첫째, 가치의 총량( $vx$ )이 가격의 총액( $px$ )와 같은가, 둘째, 잉여가치의 총량( $evdx$ )이 이윤의 총액( $rp(A+dl)x$ )와 같은가, 마지막으로 가치로 측정된 자본총량에 대한 잉여가치총량의 비율( $evdx/v(A+dl)x$ )이 생산가격으로 계산한 이윤율( $rp(A+dl)x/p(A+dl)x$ )와 같은가 하는 점이다.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렇지만,  $A=0$ 나  $e=r=0$ 와 같은 의미없는 경우외에도 두 가지 흥미있는 경우 총계일치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Sraffa(1960)가 말하는 각재화 투입물의 구성비가 산출물의 구성비와 같은 標準體系(standard system)이거나, 맑스 자신이 상정한 유기적 구성이 동일한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두 경우가 각각 산출물벡터가 중간재투입계수행렬의 右側特性벡터이거나, 노동투입계수벡터가 중간재투입계수행렬의 左側特性벡터인 경우임을 보이고자 한다.

**定理2:** (i) 산출물벡터가 투입계수행렬의 우측특성벡터인 경우이거나, (ii) 노동투입계수벡터가 투입계수행렬의 좌측특성벡터이면, 각재화의 가치와 생산가격의 비가 같다.

**證明:** (i) 산출물벡터( $x$ )가 투입계수행렬의 우측특성벡터( $A$ )이면, 각재화의 투입물의 비율과 산출물비율이 같다. 즉,  $\lambda x = Ax$ . 이 때 최대특성근을  $1/(1+R)$ 로 잡으면,  $R$ 은 이 경제의 최대성장률 또는 스타파가 말하는 標準比率(standard ratio)이 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산출물의 수준을 정하면, 그 산출물벡터는 스타파가 정의한 標準商品이 된다.

$$(2.2.8) \quad \begin{aligned} [I - (1+R)A]x &= 0, \\ lx &= 1, \\ p(I-A)x &= 1. \end{aligned}$$

첫째 조건은 각재화에 대해 투입물과 산출물의 비율이 동일하다는 의미이며, 둘째 조건은 필요한 노동량의 수준을 1로 잡았다는 의미이며, 셋째 조건은 중간재투입물을 공제한 순산출의 액수를 1로 잡았다는 의미이므로,  $A$ 행렬 하나에 대해 이 세 조건을 만족하는  $x$ 벡터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데, 두께 조건을 고쳐쓰고, 가치에 관한 정의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다.

$$lx=l(I-A)^{-1}(I-A)x=v(I-A)x=1.$$

위의 식과 세제 조건을 비교하면,  $p(I-A)x=v(I-A)x=1$ 이므로,  $px=vx$ 가 된다. 말하자면, 각재화의 가치와 생산가격은 비례하므로, 소위 총계일치의 명제는 성립함을 쉽게 보일 수 있다.

(ii)  $l$ 벡터가  $A$ 행렬의 좌측특성벡터인 경우 총계일치의 명제가 성립함은 위의 방식과 유사하게 증명된다. 또한 이 가정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부문간 유기적 구성의 동일과 동치조건임도 증명될 수 있다. 먼저,  $l$ 이  $A$ 의 좌측특성벡터이고  $\lambda$ 가 특성근인 경우,  $(A+dl)$ 의 특성근이  $(\lambda+ld)$ 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2.2.9) \quad l(A+dl)=lA+ldl=\lambda l+ldl=(\lambda+ld)l.$$

가치의 정의식과 페론-프로베니우스 정리를 이용하여, 가치가 투하노동량에 비례함을 쉽게 보여진다.

$$(2.2.10) \quad v=(I-A)^{-1}l=\{1/(1-\lambda)\}l.$$

$r=R$ 인 경우 생산가격의 정의식은 다음과 같다.

$$(2.2.11) \quad p=(1+R)p(A+dl).$$

그런데, 위 식에서 (2.2.9)에 따라  $l$ 벡터에 비례하는  $(\lambda+ld)l$ 이  $(A+dl)$ 의 특성벡터이므로,  $p$ 벡터도  $l$ 벡터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v$ 와  $p$ 의 구성인자의 비율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i$ 부문의 중간투입물의 행벡터를  $a_i$ 라고 정의하고, 이 중간투입물의 가치를 구해보자. 우선  $vA=(I-A)^{-1}lA=\{\lambda/(1-\lambda)\}l$ 이므로,  $va_i=\{\lambda/(1-\lambda)\}l_i$ 이다.

각부문별로 유기적 구성( $q$ )이 동일한 경우, 정의에 따라 중간재투입물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의 비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va_i/l_i:vd=\lambda/(1-\lambda)vd=q.$$

즉  $va_i=q_l:vd$ 이므로, 각열에 대해 함께 쓰면  $vA=qvd$ 이 된다. 나아가 가치의 정의를 유념하면, 다음과 같이 가치벡터가 노동투입계수벡터와 비례하므로, 유기적 구성이 동일하다는 가정과 노동투입계수가  $A$ 행렬의 좌측특성벡터라는 조건이 동치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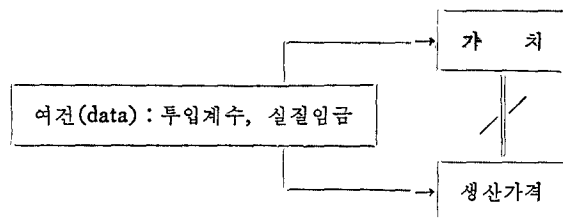
$$v=vA+l=(qvd+1)l.$$

이상에서 유가적 구성이 부문간에 동일하면, 가치위 비율과 생산가격의 비율이 같음을 알 수 있다. ■

실질임금이 후불로 주어지는 경우, 유사한 내용의 정리의 증명은 Marglin(1984)에 의해 제시되어 있는데, 마글린에 따르면, 스타파의 표준상품에 관한 가정이나 맑스의 유가적 구성 동일의 가정이나 실제적인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 하면, 스타파의 표준상품은 임의의 투입계수행렬에 대해 반드시 한 가지가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의 산출물 구성이 표준체계를 따른다는 보장이 없으며, 맑스의 경우에는 노동투입계수행렬이 투입계수행렬의 특성벡터라는 기술적인 전제가 불합리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맑스 이론가들이 스타파의 이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연구의 범위면에서 마르크스가 광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研究의 範圍라는 것은 價値論의 整合性이 보장되면서, 연구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합성을 어느 정도 회생해야만 달성되는 것이므로 스타파와 맑스의 차이는 이론가의 취향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지 방법론상 어떤 한 쪽이 다른 쪽에 비해 지배적으로 우수한 이론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위의 정리에서 밝혀진 사실을 다시 요약해 보면, 제한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가치와 생산가격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둘러싸고, 맑스의 가치론의 정합성과 적용범위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뵘 바베르크가 마르크스의 가치론은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한 이래, 많은 맑스의 비판가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맑스의 이론에 비교적 우호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맑스의 가치론의 일관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사람도 있었다. 이를 많이 사용되는 그림을 그려 설명하면, <그림 1>과 같이 주어진 기술투입계수와 실질임금이 주어진 경우 가치와 생산가격은 결정되나,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난점에 봉착하여, 많은 맑스 옹호자들이 노동가치론의 정합성을 해치지 않도록 시도하였으며, 이는 전형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제시되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서는 강남훈(1986)의 서베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는데, 모든 해결책이란 사실상



<그림 1>

총계일치의 명제중 한 가지가 성립된다고 미리 전제하고, 그 방정식을 가치 및 생산가격결정식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 가지 방정식을 미리 삽입하면, 물론 經濟條件으로 생각되던 한 파라미터를 변수로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Foley(1986), Lipietz(1982) 등은 가치로 측정된 부가가치액과 가격으로 측정된 부가가치액이 같다고 전제하는 대신, 실질임금이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 화폐임금이 주어졌다고 보고 있다. 화폐임금이 주어졌다고 보는 것이 현대경제에서 크게 나쁜 가정은 아니므로 용인될 수도 있겠지만, Roemer(1990)의 지적대로 그렇다면 실질임금이 아니라 화폐임금이 주어졌다는 가정하에서 노동력의 가치가 노동자의 계급적 힘을 나타내는 현실적인 지표가 될 것인가에 대해 충분한 정당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전형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리 해답이 성립된다고 전제함으로써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전제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그러한 전제하에서 맑스의 다른 동학적 이론들이 수미일관하게 체계화되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아직 어떤 방식이 좋은지는 맑스이론가 사이에서도 뚜렷한 설명이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 2.3. 그 밖의 內在的인 問題들

가치론과 관계된 문제들로서 마르크스의 이론체계상 내재적인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結合生産과 固定資本問題, 熟練勞動 또는 複雜勞動의 計算問題, 地代決定과 市場價格의 問題 등이 있으며, 다재화 모형하에서 마르크스의 명제인 이윤율저하설이나 노동계급의 상대적 궁핍화 등의 타당성 문제가 있다. 이 중 후자에 해당되는 문제는 이미 일재화 모형에서도 이론적 타당성이 의문시 됨을 보였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되는 가치론과 관계되는 문제를 순서대로 다루어 보겠다.

#### 2.3.1. 結合生産과 固定資本問題

결합생산이 존재할 경우 마르크스의 기본명제가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Steedman(1977)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결합생산이 있는 경우 잉여가치율이 양이라는 조건과 이윤율이 양이라는 조건이 서로 동치가 아닐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재화가 동시에 생산되는 純粹結合生産過程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공정(process)이 있다고 하자. 각 공정의 투입물과 산출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투 입 물			산 출 물	
	1재	2재	노동	1재	2재
공 정 1	5	0	1	6	1
공 정 2	0	10	1	3	12

이 때, 6단위의 노동에 대한 실질임금제 조합이 3단위의 1재와 5단위의 2재라고 한다면, 생산가격은 다음의 연립방정식을 풀어 구할 수 있다. 단, 1재와 2재의 가격은 각각  $p_1$ ,  $p_2$ , 단위기간당 이윤율 또는 이자율은  $r$ , 화폐임금은 1이라고 한다.

$$\begin{aligned}(1+r)5p_1+1 &= 6p_1+p_2, \\ (1+r)10p_2+1 &= 3p_1+12p_2, \\ 3p_1+5p_2 &= 6.\end{aligned}$$

위의 식들을 풀면,  $p_1=1/3$ ,  $p_2=1$ ,  $r=0.2$ 가 나오므로, 이 생산가격체제는 의견상 문제가 없다. 또한 산출수준으로 볼 때, 공정 1을 5배, 공정 2를 1배로 가동하면, 투입-산출관계도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음도 확인된다.<sup>(3)</sup>

그런데, 각재화의 가치를  $v_1$ ,  $v_2$ 라고 할 때, 다음 연립방정식을 풀면 문제가 발생한다.

$$\begin{aligned}5v_1+1 &= 6v_1+v_2, \\ 10v_1+1 &= 3v_1+12v_2.\end{aligned}$$

위 식에서 2재의 가치는 2이지만, 1재의 가치는 (-1)이므로 문제가 된다. 또한 6단위 투입되는 노동에 대한 노동력의 가치를 계산해보면,  $3v_1+5v_2=3 \cdot (-1)+5 \cdot 2=7$ 이므로, 잉여가치는  $(6-7)=-1$ 이 된다. 말하자면, 잉여가치가 음인데도 이윤율이 양인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난점에 대해 Morishima(1973)는 線型計劃法을 이용하여 가치를 각재화의 순생산 1단위를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노동량이라고 정의하고, 공정 2의 경우 비효율적인 공정이므로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물론 모리시마의 해결책은 그 자체로서는 타당하다고 하겠지만, 맑스 자신의 경우 가치를 사회적으로 평균적으로 투입되는 노동량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과연 장기균형상태에서 생산가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는 타당할지 의문시된다.

결합생산과 관련된 문제로서 固定資本의 減價償却分을 계산하는 문제가 있다.<sup>(4)</sup> Sraffa(1960)에 의해 확인되었듯이 다재화모형에서 고정자본의 물량적인 감가상각상태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감가상각액수는 다른 재화의 가격과 이윤율과 동시에 계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불변자본을 계산하면서, 감가상각액을 투하노동량으로 표시하는 것과 가격면에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유동자본만

(3) 각 공정의 규모를 주어진 배수로 하면, 1재와 2재의 잉여는 각각 5단위와 2단위가 된다.

(4) 고정자본은 한 생산기간이 끝난 뒤에도 소비재와 함께 증고기계형태로 고정자본이 남으므로 결합생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존재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겠지만, 맑스가 고전학파의 스미스등을 고정자본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비판한 데 비추어 보면, 맑스의 가치론 자체도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 2.3.2. 複雜勞動의 還元問題

맑스는 숙련도의 차이에 따른 노동투입시간과 생산량간의 차이를 복잡노동을 단순노동의 일정한 배수로 환산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쉽게 처리하고 있다.

어떤 상품이 아무리 복잡한 노동의 생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통해 단순노동의 생산물과 동등하게 되면, 따라서 단순노동의 일정한 양을 표시할 뿐이다. 서로 다른 종류의 노동이 그 측정단위로서의 단순노동으로 환원되는 비율은 하나의 사회적 과정에 의해 생산자들의 배후에서 결정되며, 따라서 생산자들에게는 관습에 의해 주어진 것 같이 보인다(제 1권, p. 55).

이렇듯 복잡노동의 환원문제를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기계의 도입에 의해 노동자의 숙련도가 단순하게 되는 소위 脫熟練化(de-skilling)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맑스는 “기계가 노동자를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동으로부터 일체의 내용을 빼앗아”(제 1권, p. 538) 버린다고 말한다.

사실상 노동자의 숙련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만일 熟練形成이 자본주의적 교육기관에 의해 되는 것이라면, 숙련형성에 든 비용에 대해 교육기간동안의 기회비용으로서 이자가 산입되어야 하므로, 노동시간과 비용간에 괴리가 발생한다. 반대로 숙련형성이 비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노동시간과 비용이 일치할 수도 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숙련형성이 기업체 내부에서 現場學習(on-the-job training) 형태로 이루어질 때, 어떤 부분은 기업체의 경비로 되지 만, 어떤 경우에는 어깨너머 배우기 식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루어진다면, 복잡노동을 어떻게 단순노동으로 환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맑스의 언급처럼 간단히 계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 2.3.3. 地代와 市場價值

맑스의 지대이론의 정합성 문제는 Negishi(1989)와 같이 비판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Fine(1982)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자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네기쉬에 따르면, 差額地代를 알기 위해서는 산출물의 수량을 알아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요를 알아야 하므로, 가치가 노동투입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치법칙은 틀리다고 말한다. Samuelson(1992)은 차액지대와 절대지대를 함께 고려할 때, 유기적 구성이 낮은 농업부문에서 가치가 최대의 노동투입량

에 의해 결정되므로 마르크스 전체체계에서 잉여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전형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비판등에 비해, Fine(1982)은 絕對地代는 전체경제에서 생산된 잉여가치가 농업 지주의 자본진입제한에 의해 생긴 것임을 양적으로 보이고, 지대의 역사적 동태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시 되는 것은 지대이론을 정태적 이론으로 보든 동태적 이론으로 보든 간에, 일관된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平均的인 生産者에 의해 시장가치가 결정되는 데 비해, 농업부문에서는 限界的인 生産者에 의해 시장가치가 결정된다는 맑스의 설명은 일관성이 없다.

여기서는 자본주의에서 가격결정원리가 어떤가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쪽이든 각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자본주의 원리가 된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다. 제조업부문에서도 한계적 생산자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면 모든 생산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농업부문과 같이 한계적인 가격결정방식을 취하든지, 만일 잠재적인 진입자를 억제하기 위해 평균적인 가격결정방식을 취했다면, 농업부문에서도 평균적인 가격결정방식을 취하거나 토지절약적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가격이론이 마르크스에게서는 결여되어 있다.

지대와 관련하여 본원적 투입요소가 노동외에 토지가 있는 경우 과연 상품의 가격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탐구되어야 한다. Samuelson(1959)의 지적대로 노동은 실업의 존재로 희소한 자원이 아닌 반면 토지가 희소한 자원이라면 당연히 상대가격은 투입된 토지의 양에 비례하게 되므로 소위 土地價値論(land theory of value)이 성립된다. 만약 노동과 토지의 제약이 모두 해당된다면 수요조건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받으므로 投下勞動價値論은 상대가격의 근사식은 될지언정 정확한 가격이론이 되기는 어렵다. 예외적으로 노동투입계수와 토지투입계수가 각 재화에 대해 동일한 경우에만 노동계약과 토지계약에 의한 생산가능곡선이 일치하므로, 노동가치론이 성립할 수 있다.<sup>(5)</sup>

### 3. 맑스理論의 現實 說明力

#### 3.1. 市場機構圖에서 본 問題

맑스의 이론이 시장기구의 작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알라스 경제학보다 설명력이 떨어진

(5) 이 문제에 대해서는 Hong(1991) 참조.

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세삼 이 문제를 말하는 것이 부당한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맑스이론의 범위를 확대시킬 때 장애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歪曲된 偏向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편향만 없다면 이 문제가 맑스이론의 결정적 약점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첫째, 맑스의 시장기구 분석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數量變化와 資本移動, 技術開發 등 단기, 장기, 최장기의 문제 있어서 무엇이 經濟主體의 行動을 가져오는 지표인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수량변화는 시장가격에 의해, 자본이동은 생산가격에 의해, 기술개발은 가치에 의해 규제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세 가지 지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체계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특히 장기균형점이 아닐 때, 利潤率最大化, 利潤最大化, 剩餘價值最大化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어떤 선택기준을 갖는 것인지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맑스 해설서를 보면 이를 자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맑스는 가격기구의 작동에 대해서 너무 불신하여, 균형에서 벗어나면 자본주의의 파국이 생길 것과 같은 과장을 해놓고 있다. 예를 들어 『資本論』 제 2권에 나오는 재생산표식의 경우 部門間 均衡이 맞지 않을 때, 가격변화와 경제주체의 행동변화에 대해 정밀하게 탐구하지 않음으로서 후대에 소위 붕괴에 관한 논쟁을 가져왔다. 물론 맑스가 시장가격의 변화가 수급의 조정을 가져오고, 자본이동의 변화도 가져온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기술변화와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는 최장기의 문제가 자본주의 발전의 궁극적인 장애요인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어떻게 部門間 變化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이 전체적인 경향으로만 설명되고 있다.

셋째, 맑스는 수요의 성격에 대해 탐구하지 않음으로써 현실경제에서 점점 중요성이 생긴 서비스商品이나 流通産業의 기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맑스는 모든 상품이 사용가치를 가지지만 이러한 물리적 성격이 자본주의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서비스상품은 비생산적인 것으로서 잉여가치 생산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유통부문에 종사하는 인력도 생산자본의 정비 층에서 지불받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잉여가치를 창조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생산규모의 절대적 크기나 생산규모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에서 잉여를 발생시키는 문제와 독립적이라고 생각한 데서 연유하나, 현실경제에서 이러한 문제가 經濟成長과 직결되어 있음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광고나 마케팅에 의해 어떤 상품이 대중적인 소비재 또는 임금재가 되

는가에 따라 잉여가치결정에 영향을 주는가가 결정되므로, 이 부문종사자를 비생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도식적인 판단이 된다.

이상에서 말한 문제는 맑스 경제학자 내에서도 한계로서 생각하고 있던 문제이지만 구태여 여기서 새로 언급하는 연유는 위와 같은 맑스경제학자의 편향이 사회주의 경제운영에도 나타나고 사회주의 경제의 몰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맑스 경제학이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이론임에는 틀림없으나, 현실의 특정부문인 생산과정이나 조직내에서의 노사대립을 과대하게 중시하고 엄연히 현실적인 문제인 수요, 규모, 유통과정 등을 등한시하였음은 반성해야 할 점이다.

### 3.2. 資本主義 組織에 관한 問題

맑스 경제학의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호소력이 남아 있는 영역은 Bowles(1985)의 말대로 자본주의 조직의 핵심적인 관계인 노사간의 역학 관계를 이론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맑스 경제학이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잘 설명하는가를 직접 다루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를 勞動力의 特殊性 問題, 剩餘價値 發生과 時間의 問題, 分業과 資本主義 發生問題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다.

첫째, 맑스는 자본주의의 교환관계에서는 가치법칙대로 등가교환이 이루어 지므로,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어떤 특수한 상품에 의해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노동력이란 상품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그것을 일단 구입한 후에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사용가치는 가치보다 크므로 그 차이가 잉여가치가 된다고 말한다. 물론 노동의 기여분에 비해 지불받는 노동력의 가치가 적다면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이 생산과정에서 잉여가치가 발생하는 유일한 원인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겠다. 우선 Keen(1993)의 지적대로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차이가 나는 것이 노동력 하나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중고기계의 경우 성능의 不確實性 때문에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치는 영이라도 실제 사용자에게 주는 사용가치는 양일 수 있다. 사실상 마셜의 消費者剩餘라는 개념은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므로 노동력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차이에 의해서만 잉여가 나온다는 관념은 상당히 편협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맑스는 기성경제학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부르즈와 경제학에서는 잉여가치의 존재는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잉여가치의 존재가 가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또한 다음과 같은 것이 가정되고 있다. 즉, 유통에 투입된 상품량의 일부는 자본가가 자기의 자본과 함께 유통에 투입한 것이 아닌 어떤 가치를 표시한다는 것, 그러므로 자본가는 자기의 생산물과 함께 자기의 자본

이상의 어떤 초과분을 유통에 투입하고, 그리고 이 초과분을 유통으로부터 다시 끌어 낸다는 것이 가정되고 있다(제 2 권, p. 383).

이 비판은 일면 타당하게 보이지만, 마르크스의 인식의 한계도 보여준다. 맑스는 경제전체를 관찰하는 경우 생산과정에서 잉여가 나온다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단순한 관찰 방식과 생산과정에서 잉여가 나오는 유일한 이유가 노동력의 특수성 때문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노사간의 경제적 입지의 차이에만 있다는 생각을 혼동하고 있다.

물론 잉여가 발생하는 요인 중에서 무엇이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가는 세계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중요한가, 노사관계의 대립이 중요한가 하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론가의 취향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므로 다른 이론은 오류이고 한 이론은 맞는 것이 아니라 설명의 범위와 현실 적합성의 문제에 따라 이론의 우열이 드러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둘째, 잉여가치의 발생과 시간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앞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잉여의 발생이 우회적 생산의 이익에 의해서 생긴다는 뵘 바베르크의 생각에 따르면 지난 기간에 투입된 노동력의 가치가 이번 기간에 산출된 부가가치를 모두 지불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터무니 없는 것이 된다. 반대로 맑스는 시간의 단순한 경과가 경제에서 어떤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비판하고 있다.<sup>(6)</sup>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이 과연 맑스의 잉여가치의 계산에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는지는 생각해 보자.

맑스는 단위기간당 이윤율에다 연간 회전수를 곱해서 연간 이윤율을 계산하고 있다. 이 계산은 맞는데 문제는 단위기간당 이윤율을 높히는 요인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술적 사회적 특성으로 보는 반면, 회전수를 높히는 요인은 주로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유통자본의 등장으로 인해 회전수가 높아지는 것은 간접적으로 생산적인 데 비해, 단위기간당 잉여가치율을 높이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상업자본은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가치도 잉여가치도 생산하지 않는다. 상업자본은 유통기간의 단축에 기여하는 한, 상업자본은 산업자본가가 생산하는 잉여가치의 증대에 간접적으로 공헌한다. 상업자본이 시장의 확대에 기여하고 자본들 사이의 분업을 촉진하며 이리하여 자본으로 하여금 보다 큰 규모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한, 상업자본의 기능은 산업자본의 생산력과 축적을 촉진한다(제 3 권, p. 336).

그러나 현실적으로 잉여가치는 기간에 따라 의미를 가지는 流量變數(flow)라면 회전수를 높

(6) Weizsäcker는 절충적 견해로서 발생한 잉여중 자본가가 투자에 쓰면 착취가 아니고, 낭비를 하면 착취가 되므로 (최대성장률-현실성장률)=착취율이라고 본다.

이는 것과 단위기간당 잉여가치율을 높이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다. 회전기간이 짧은 업종은 그 기간 자체가 생산의 기술적 특성이지만 단위기간당 잉여가치율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과 물리적으로 분리가능한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임금 기금설과 같은 이론을 쓴 데서 드러나듯이 유량과 저량을 철저히 구별 못한 고전학과 경제학자에 비해 맑스의 이론은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구분면이나 회전기간 계산면에서 보듯이 時間 觀念에 있어서 다소 앞섰다고 생각되지만, 유량과 저량을 철저히 구분하지 못한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세째로, 맑스의 자본주의 발생에 관한 인식을 보기 위해 소위 始初蓄積에 관한 내용과 이와 관련하여 분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검토해 보자. 맑스의 시초축적에 관한 설명은 사실상 자본주의의 움직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비자본주의 경제의 자본주의화과정이므로 경제사의 영역이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농민이 생산수단인 토지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되어 임금노동자로 되고 소규모 생산자가 산업자본가로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은 “무자비한 독력 아래에서 수행된 교회재산의 약탈, 국유지의 사기적 양도, 공유지의 횡령, 봉건적 및 씨족적 소유의 약탈과 그것의 근대적 사적 소유로의 전환”(제 1 권, p. 922)이었다. 나아가 이러한 양극화과정이 계속되어 “경제적 관계의 무언의 강제”(제 1 권, p. 927)가 지속되어 노동자가 자본에 의해 실질적으로 포섭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확립에는 機械化와 工場制의 導入이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즉 “기계는 기술적 관점에서는 종래의 분업체계를 타파하기는 하지만, 그 분업체계는 처음에는 매뉴팩처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으로서 공장에 존속되며, 다음에는 자본에 의하여 노동력의 착취수단으로서 더욱 지독한 형태로 체계적으로 재생산되어 고정”(제 1 권, p. 537)되어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절망적 종속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화 과정이 과연 현실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한 가지 예로 Marglin(1974)은 노동자의 지배를 위해 아무런 생산성의 이익없이 공장제 수공업이 등장하여 감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기득권자가 자본주의를 만들었다고 본다. 이에 비해 Landes(1986)는 시계공업등의 예를 들면서 거래비용의 절감등을 위해 독립적 수공업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본주의적 운영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본다.

어떤 요인이 큰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제사적으로 검증해 보아야 할 문제이므로 본 논문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문제이나, 한 가지 맑스의 인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조직에 관해 맑스가 “협업이나 분업으로부터 생기는 생산력은 자본가에게 아무런 비용도 드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노동이 만들어내는 자연력”(제 1 권, p. 493)이라고 생각하는 점이다. 이

러한 인식하에서 주어진 분업의 정도하에서 잉여가치의 생산에 대해 맑스는 탐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잉여의 생산에서 勞動組織의 變化를 독립적인 문제로 생각하는 일면적 인식이 엿보인다.

아담 스미스의 선구적 지적대로 분업의 발달이 시장의 크기에 의존하고, 분업에 의해 생산성이 증대된다면 시장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분업이 증진하고 나아가 생산조직도 변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이것이 자본주의가 비자본주의 부문을 해체하고 노동인구를 끌어들이는 적극적 요인, 또는 수요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Leijonhufvud(1986)는 去來費用節減과 分業의 利益 및 자본주의 등장을 연결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아담 스미스가 지적한 대로 시간절감, 숙련도 향상, 기계발명 등에 의한 생산성의 이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카도식의 비교우위에 따른 직무배치에 의해 생산성의 이익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분업의 증대는 자본가가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나타난다기보다는 많은 노력에 의해 나타나며, 다만 노동량이나 자본량과 같이 물량적 지표로 나타내기 어려운 경영과 관련된 요소로 쉽게 간과되기 쉬운 요소라고 하겠다. 현대경제에서 이러한 경영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매매되기 힘든 요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진다고 볼 때, 분업을 아무런 비용없이 획득된 것이라고 보는 인식은 현실의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기업내의 노사관계의 다양한 측면의 노사대립뿐만 아니라 노동자간의 동료관계에 의해서도 관찰되어야 한다. Akerlof(1982)의 지적대로 노동자가 同僚關係의 유지에 의해서도 일을 통해 보람을 느낀다면, 받는 임금보다 더 일함으로써 팀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유인이 존재하며, 사용자도 시장청산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선물로서 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노사관계는 단순한 물건을 매매하는 관계도 아니며, 맑스의 생각대로 지배 복종 관계도 아니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는 맑스의 분석장치는 큰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시초추적과는 약간 다른 문제이지만 과연 누가 노동자가 되고 누가 자본가가 되는가 하는 人的 所得分配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맑스위 해답은 불충분하다. 이에 대해 Roemer(1988)는 초기자산상태에서 노동만이 있는 경우부터 다른 자산이 있는 상태까지가 순수노동자, 자영업자, 자본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대응원리를 개인위 경제적 선택결과로 설명했으며, 이러한 대응원리는 자본시장의 점권도에도 적용된다고 분석했다. 개인의 계급귀속여부가 사회적 관계 때문인지 개인의 선택 때문인지는 오랜 사회과학적 질문이지만, 맑스나 어떤 경제학자도 일의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의 다양성 때문이다. 따

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 맑스경제학의 우위를 주장할 근거는 별로 없다.

#### 4. 맺 음 말

맑스의 경제이론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거시적으로 관찰하여, 자본주의의 움직임의 기본요인이 勞使關係의 對立에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은 제한된 범위에서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진다고 생각된다. 즉 기업내 노사관계의 대립이나, 계급간 알력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이러한 점에서 맑스 경제학은 거시경제학적 가설체계로서 이론의 단순성면에서는 설득력을 가진다고 본다. 다만 그 가설체계하에서 나온 명제인 이윤율저하설등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거나, 보다 세련된 가설로서 제시되지 못하여 덜 발달한 상태이나 발달의 소지는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정성진(1990)의 연구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이윤율저하를 밝히고 있으나, 이윤율저하를 가져온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요인이 해외시장을 지향한 공업화에 의해 나타났으므로 기계도입의 이유를 본격적으로 탐구해야 함을 밝혀주고 있다. 미국경제에 관한 Mosely(1991)의 연구는 이윤율저하의 주된 요인이 비생산적 부분의 증대에 의한 생산성 저하에 있다고 밝히므로 수요의 성격도 연구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제한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맑스이론을 확대하여 시장기구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전형문제가 만족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수요의 규모, 성격,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 맑스가 너무 일면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에 연유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자본주의 조직자체를 인식함에 있어서 주어진 생산규모하에서 노사관계의 대립에만 주목함으로써, 규모가 변함에 따라 조직의 성격이 바뀐다는 力動的인 認識이 결여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 내에서 기업간의 경쟁이나, 국민경제간의 경쟁과 노사관계의 성격변화에 대해서 현실감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맑스의 이론에 도입하기 위해서 민족문제, 국가문제를 의습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맑스의 분석도구가 너무나 제한적이라고 보인다. 왜냐 하면, 현실의 움직임을 노사관계라는 단순 지표로서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Kuhn(1977)은 과학자의 이론선택기준으로써 논리일관성, 연구의 현실적합성, 현재연구범위, 장래성과의 풍부성, 단순명료성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맑스경제학의 장점은 單純明瞭性이지 研究의 範圍나 豐富性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서울대학교 經濟學部 副教授  
 151-7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화 : (02) 880-6379  
 팩시 : (02) 888-4454

### 參 考 文 獻

- 강남훈(1986): “전형문제에 대한 재검토,” 한신경제 과학연구소편, 『가치이론』, 까치, 51~75.
- 김수행(1988a): 『자본론연구』, 한길사.
- 김수행(1988b): 『정치경제학원론』, 한길사.
- 송현호(1992): 『경제학방법론』, 비봉출판사.
- 정성진(1990): “한국경제에서의 마르크스비율의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kerlof, George A. (1982): “Labor Contracts as Partical Gift Exchang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97, 543~569.
- Bowles, S. (1985): “The Production Process in a Competitive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75, 1.
- Blaug, Mark (1960): “Marxian Economics and Technical Change,” *Kyklos*.
- Bradley, I., and M. Howard (ed.) (1982): *Classical and Marxian Political Economy*, New York, St. Martin Press.
- Elster, J. (1985): *Making Sense of Marx*, Cambridge Univ. Press.
- Fine, B. (1982): *Theories of the Capitalist Economy*, New York, Holmes and Meier Publihsers.
- Foley, D. (1986): *Understanding Capital: Marx's Economic Theory*, Harvard Univ. Press.
- Gillman, J. (1957): *The Falling Rate of Profit*, Dobson.
- Hong, Keehyun (1991): “A Simple Sraffian Trade Model with two Primary Inputs,” mimeo.
- Keen, Steve (1993): “Use-Value, Exchange Value, and the Demise of Marx's Labor Theory of Value,”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15, 1, 107~121.
- Kuhn, T. (1977): “Objectivity, Value Judgement, and Theory Choice,” in T.S. Kuhn(ed.), *The Essential Tension*, 319~391.
- Landes, D.S. (1986): “What Do Bosses Really Do?,” *Journal of Economic History*, 46, 3, 585~623.
- Leijonhufvud, Axel (1986): “Capitalism and the Factory System,” in R.N. Langlois(ed.), *Economics as a Process*, Cambridge Univ. Press.
- Lipietz, Alan (1982): “The So-Called “Transformation Problem” Revisited,” *Journal of Economic Theory*, 26, 59~88.
- Marglin, S. (1974): “What Do Bosses Do?,”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6, 2, 60~112.

- \_\_\_\_\_ (1984): *Growth, Distribution, and Prices*, Harvard Univ. Press.
- Marx, K. (1867): *Capital*, 1~3; 김수행 역, 『자본론』 1~3권, 비봉출판사.
- Morishima, M. (1973): *Marx's Economics*, Cambridge Univ. Press.
- Mosely, Fred (1991): *The Falling Rate of Profit in the Postwar United States Economy*, Macmillan.
- Negishi, Takashi (1989): *History of Economic Theory*, North-Holland.
- Okishio, N. (1961): "Technical Change and the Rate of Profit," *Kobe University Economic Review*, 7, 86~99.
- Pasinetti, L. (1977): *Lectures on the Theory of Production*, Macmillan Press Ltd.
- Roemer, J. (ed.) (1986): *Analytical Marxism*, Cambridge Univ. Press.
- \_\_\_\_\_ (1988): *Free to Lose*, London, Radius.
- \_\_\_\_\_ (1990): "Book Review on Foley's Understanding Capital,"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8, 4, 1727~1730.
- Rosenberg, N. (1982): *Inside the Black Box: Technology Economics*, Cambridge Univ. Press.
- Samuelson, Paul (1957): "Wages and Interest: A Modern Dissection of Marxian Economic Models," *American Economic Review*, 47, 884~912.
- \_\_\_\_\_ (1959): "A Modern Treatment of the Ricardian Economy (I), (II),"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73, 1, 1-35 & 73, 2, 217~231.
- \_\_\_\_\_ (1992): "Marx on Rent: A Failure to Transform Correctly," *Journal of the History of Economic Thought*, 14, 2, 143~167.
- Schumpeter, J. (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ranslated by R. pie, Oxford Univ. Press.
- Sraffa, P. (1960):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Cambridge Univ. Press.
- Steedman, I. (1977): *Marx after Sraffa*, London.
- Wood, J.C. (ed.) (1988): *Karl Marx's Economics: Critical Assessment*, Croom Helm.